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1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배달앱 '일단시켜' 공익감사 청구	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일단시켜' 감사 청구 가결	2
江原日報	03면	'양구 광역의원·동해 양구 기초의원' 3명 재보선 확정	3
강원도민일보	02면	[알림] 위드코로나 시대 강원관광 해외마케팅 전략 모색	3
강원도민일보	03면	"학교 스마트기기 1인 1보급 실효성 따져야"	4
강원도민일보	17면	철원지역 농협-도교육청, 철원오대쌀 학교급식 제공 간담...	4
江原日報	04면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 지방소멸 극복"	5
강원도민일보	23면	도교육청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5
江原日報	04면	민원 업무 담당 '강원교육콜센터' 내년 3월 개소	6
 KBS 춘천	온라인	[이슈&토크] 강원도의회 예산안 심사 돌입...긴축재정 속 ...	6
 KBS 춘천	온라인	강원문화재단, 공적 기금 투자 20억 원 손실..."절차 문제" ...	7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열려	8
 ms투데이	온라인	강원 '성평등정치'의 현 주소는??성주류화정책 확산 토론회...	9
江原日報	03면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자치도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10
 KBS 춘천	온라인	'급발진 의심' 지원 조례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가결	10
G1방송	온라인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11
 연합뉴스		강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1/2]	12
CBS	온라인	박기영 강원도의원 "선제 대응으로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해..."	14
 연합뉴스		강원 3년간 빙판길 교통사고 221건..."시기별 안전대책 필..."	15
위클리오늘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	16
NWS내외	온라인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17
글로벌뉴스	온라인	양속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폐천부지 매각 "기사,허구성 ...	18
스포츠서울	온라인	양속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폐천부지 매각 관련 "과도한 ...	19
亞洲經濟	온라인	김기하 의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완료 앞당길 ...	20
국제뉴스	온라인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	21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이울배반, 고교학점제와 통합수능	2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3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	23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23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23
강원도민일보	04면	학교 급식실 안전을 영양사가?... 책임 떠넘기기 논란 확산	24
江原日報	02면	쟁점 예산 놓고 여야 힘겨루기... 강원 현안 뒷전	24
강원도민일보	02면	민관군 7개 기관 '북 임남담 무단 방류 대응' 맞손	25
江原日報	02면	청소년올림픽 성공 의지 원주서 타올랐다	26
강원도민일보	07면	'수변도시 춘천 구현' 경관 가이드라인 재정비	26
강원도민일보	17면	화천 숲가꾸기 산불예방·난방 지원 일석이조	2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특별자치시도 '지방 전성시대' 열길	2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농업기술원 10억원 감액 파문 살피길	29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자체 살림 '한파', 지역경제 살릴 방안 시급하다	30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역 특화·연대로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31

江原日報

2023 11 29 ()

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28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도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두원기자

도의회, 배달앱 ‘일단시켜’ 공익감사 청구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 제기
“최 전 지사 업체 공모 전 만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가결
경제국장 “도 공모 관여 안해”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본보 2022년 10월20일자 3면 등 보도)이 있다며 2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도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는 11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이다.

도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24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엄기호(국민의힘·철원) 재정효율화특위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임 최문순 도정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도경제진흥원을 통해 2020년 9월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했다”며 “총 8개 업체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코리아센터가 선정됐다. 그런데 공개모집 이전인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최 전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가 업체 측과 사전에 3차례 만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공모 전 내정됐고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업자 선정이 적절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정효율화특위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남덕기자 ndkim@kwnews.co.kr

이뤄졌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석균(국민의힘·원주) 재정효율화특위 위원장은 “최문순 도정 대표적 R&D 사업인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주관 사업자가 사전 내정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알펜시아 매각 입찰 전 KH를 사전 선정하는데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 선정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법·

부당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공익 감사를 처리 규정 따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재정효율화특위 1차 회의에서도 김기홍(국민의힘·원주) 부의장은 “지역에 이미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 업체들이 있었는데 제로페이, 강원상품권 사용 기능은 일단 시켜가 해당 기능을 탑재하기 전까지 하지 못했다. 도내 스타트업을 꿈꾸는 업체들을 짓밟아 놓고 결국 외지 회사

를 키워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도 경제진흥과장이었던 최기용 경제국장은 “업체와의 만남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일을 알아가고, 배달앱 시장에 관한 자료를 얻고자 함이었다”며 “도에서는 어느 업체가 공모를 신청했고 어느 분들이 심사위원인지 모를 정도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는 다음 달 15일 본회의 의결 후 이뤄진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일단시켜’ 감사 청구 가결 28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석균)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江原日報

03

‘양구 광역의원·동해 양구 기초의원’ 3명 재보선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24곳 발표 ...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실시

내년 4·10 총선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부 지역에서도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에서 양구선거구 의원 1명과 동해시·양구군 의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4명 등 총 24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선무효 또는 사망, 사직,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다. 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선거구의 이기찬 전 도의원이 올 7월, 양구군 나선거구 박귀남 전 군의원이 지난 24일 각각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다.

이에 따라 양구에서는 2명에 대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선

거 기탁금,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9월에는 동해시 나선거구의 최명관 시의원이 별세하면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재·보궐 선거 일자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지만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등에 대한 세부 일정은 다르다.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다음 달 29일, 지역구 군의원의 예비후보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내년 1월28일부터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02

알림

위드코로나 시대 강원관광 해외마케팅 전략 모색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원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됐던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관광1번지’ 강원 관광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강원 관광 산업 지도가 새롭게 짜여지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일보는 오는 12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강원특별자치 시대, 해외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며 한류 관광 브랜딩 전략을 논의하는 ‘2023 해외관광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2023 해외관광포럼-강원특별자치시대, 글로벌 강원! 한류 관광 브랜딩 전략’

■일시: 12월 5일 (화) 오후 2시

■장소: 강원연구원 1층 리버티홀

■주최·주관: 강원특별자치도·강원관광재단·강원도민일보

■좌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주제 발표: 1. 조이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지속가능한 가치 창조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2. 박재희 하나투어 ITC 본부장-‘BTS 인더숲 투어 기획과 글로벌 판매 성공사례’ 3. 문용수 클룩 사업개발팀 팀장-‘한류 관광의 중심, 강원도: 풍부한 관광 자원과 극복해야 할 도전’

■토론: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유진호 한국관광공사 관광디지털본부장 △유승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무순)

■문의: 강원도민일보 정치부 033)260-9221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03

“학교 스마트기기 1인 1보급 실효성 따져야”

도의회 교육위, 성과 분석 주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1학년 대상 스마트 기기 1인 1보급 사업(90억원)과 관련, 건축재정 상황과는 맞지 않는만큼 사업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제324회 5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 기기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 의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스마트 기기 활용이 실효성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 재정 상황에서 1인 1보급이 필요 하나”며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놀이용으로 쓰는 게 많아 이를 방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이승진(비례) 의원은 “능률 제고를 위한 사업임에도 수업 활용 분석이나 학생 만족도 조사가 안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평균 잡아 파악된 것도 없다”며 “무작정 고교 1학년에 다 지급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래



이승진



박윤미



전찬성

같은날 열린 경제산업 위(위원장 김기철)에선 포럼에 대한 부실 운영 지적과 함께 대학 내 반도체 교육장비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대학 내 반도체 교육용 주요장비 지원의 경우도 비 100%로만 지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는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전찬성(원주) 의원은 “도 공약 사업에 270억 규모가 편성된 반면, 30% 이상에서 전액 삭감된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무려 15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경·최우은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17

철원지역 농협-도교육청, 철원오대쌀 학교급식 제공 간담회

철원지역 농협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철원오대쌀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농협 철원군지부(지부장 정도영)

와 철원농협(조합장 최진열), 동철원농협(조합장 장명), 동송농협(조합장 임채영), 김화농협(조합장 장춘집)은 지난 27일 도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엄기호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DMZ 청정 철원오대쌀 급식 제공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원오대쌀 급식 제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용

2023 11 29 ()

04

江原日報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 지방소멸 극복”

도교육청 직업교육 포럼 개최
우수인재 영입 인구 증가 효과
“중·고교 유학생 유치시장 확대
관련 정책 수립 서둘러야” 제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직업계고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철 도교육청 장학사는 28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직업교육 인구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에서 잘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 우수인재 영입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학사는 “도내 직업계고 10곳에 타 시·도 학생 1,000명과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며 “해외 이민자는 1만명 이상도 가능하므로 앞으로 중·고교 해외학생 유치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이민정책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영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북도교육청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시작한 만큼 강원도 역시 관련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직업계고 기숙사 구축 및 원활한 운영, 고등학생 이하 연수 비자(D-4-3)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구축, 외국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기용 도경제국장, 공인배 한국에너

지마이스터고 교장, 이경진 해말학교 교장,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수립과 도내 취업·정주 방안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경호 교육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소멸의 대안과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방안으로 ‘직업교육’을 제시한다”며 “교육을 통한 인구정책이 가장 훌륭한 이민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강원자치도의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한기호 국회의원과 이상호 태백시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기철 도의회 경산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23



도교육청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강원연구원에서 신경호 교육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기철 도의회경제산업위원장, 이상호 태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 인구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 11 29 ()

04

민원 업무 담당 '강원교육콜센터' 내년 3월 개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각종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강원교육콜센터'를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의 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강원교육콜센터 구축에 앞서 2명의 전문상담원을 선발해 고객서비스 및 상담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강원교육콜센터의 주요 상담분야는 △전·편입학 △학교안전사고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각종 제증명 등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임용시험 등의 내용을 집중 상담한다.

도교육청은 콜센터 운영을 통해 여러 번 전화 돌림 발생 및 업무담당자 부재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민원인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전화상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현 총무과장은 "강원교육콜센터 구축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행정이 도민들에게 정확·친절하게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2023 11 28 ()



[이슈&토크] 강원도의회 예산안 심사 돌입... 긴축재정 속 쟁점은?

앵커

얼마 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년 강원도 예산안과 관련해,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의회가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오늘 '이슈 앤 토크'에서 도의회 예산 심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2023 11 28 ()

KBS 춘천

강원문화재단, 공적 기금 투자 20억 원 손실.. .“절차 문제” 지적

앵커

최근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출연기관인 강원문화재단 역시, 재산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가 이뤄진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가 운영을 지원하는 강원문화재단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창작 지원 등을 위해 217억 원의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강원문화재단은 이 기금에서 50억 원을 홍콩 주가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ELS,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예치했습니다.

3년 만기 상품에 10억 원씩 5개 상품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금융상품의 손실률이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를 기준으로 50억 원 중 40%가량인 20억 원이 손해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김시성/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 : "(홍콩증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손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최소한 15억 원에서 20억 원은 손해가 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문제가 애초부터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문화재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일부 기금관리위원이 수익성보다는 안정적 투자가 우선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상품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절차도 논란거립니다.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마다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년 치를 한꺼번에 승인받아 온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문화재단은 투자는 법적 자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아직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신현상/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 "내년 1월부터 7월까지에 걸쳐서 만기 도래되는 상품이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상황 결과에 따라서 재단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김시성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은 강원문화재단의 투자 손실이 확정되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감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

2023 11 28 ()

江原日報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열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 주최

지방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강원권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The Campfire for Gender Equality in Politics!

2023년 11월 29일(수) 오후 2시 - 5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 지하1층
문의 02-706-6761 ckwp90@gmail.com

프로그램 안내

좌장 박윤미(강원도의원)

발표1. 횡성군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
김은숙(횡성군의원)

발표2.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권금화(시민참여단장)

발표3. 횡성군 농촌 남녀 동일임금
박은정(횡성군 홍보팀장)

토론1. 정유선(지방정치미래혁신연구소 소장)
토론2. 박해숙(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장)
토론3. 한영미(횡성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

토론회 일정

경상권(대구)	2023년 10월 12일(목)
전라권(광주)	2023년 10월 26일(목)
충청권(청주)	2023년 11월 9일(목)
강원권(춘천)	2023년 11월 29일(수)
제주권(제주)	2023년 12월 21일(목)
경기권(수원)	2024년 1월 18일(목)
서울권(서울)	2024년 2월 22일(목)

공동주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후원  주한미국대사관
U.S. Embassy Seoul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를 주제로 한다.

박윤미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은숙 횡성군의원, 권금화 태백시 시민참여단장, 박은정 횡성군 홍보팀장 등이 발표한다. 정유선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위원장, 박해숙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장, 한영미 횡성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은 토론에 참여한다.

2023 11 29 ()

ms투데이

강원 '성평등정치'의 현 주소는??성주류화정책 확산 토론회 개최

한승미 기자

성주류화정책 확산 공감토론회,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주최 29일 개최, 강원지역 모범사례 발표
황성군 농촌 남녀 동일임금 모범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 예정

성평등한 강원도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정치 안착을 위해 각 지역의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사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았다. 이 가운데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3개 분야의 발표사례 40여건이 선정됐다.

지방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강원권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The Campfire for Gender Equality in Politics!

ms TODAY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포스터 일부.

강원권 토론회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박윤미 강원도의회원이 좌장을 맡아 도내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박은정 황성군 홍보팀장은 황성군 농촌 남녀 동일임금을 성주류화정책 모범사례로 소개한다. 이와 함께 김은숙 황성군의회원은 황성군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권금화 태백시 시민참여단장은 태백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설명한다.

토론회에는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진,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황성군 여성농업인 등 강원권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계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에는 정유선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위원장, 박해숙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장, 한영미 황성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강원권 성평등정책의 현 주소를 짚는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황성군은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농촌 동일임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한 여성농민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삼각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군 이래 처음으로 2020년 발동사의 남녀 간 임금격차를 개선해 동일임금 체계를 구축한 지역인 만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40

江原日報

2023 11 28 ()

03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자치도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본보 10월11일자 3면 보도)한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7일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구분할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은 급발진 의심 사고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삭제돼 향후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았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을 수정·확대하는 '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11 28 ()

 KBS 춘천

'급발진 의심' 지원 조례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가결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어제(27일), 김용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회 의원 4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강원도가 피해자 법률상담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강원도 공용차량에 기록장치 시범 설치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상위법 개정 촉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구 nine@kbs.co.kr

2023 11 28 ()

G1방송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으며,

피해자 법률상담과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래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체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 11 28 ()

강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 위 통과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서울 이어 두 번째 제정 사례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에 이어 강원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법률상담과 심리 치료, 관용차에 페달 블랙박스 등 기록 장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 대비와 사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조례안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상자 선별과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었지만, 안전건설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삭제했다.

김용래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상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 통과 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제정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선처 탄원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2023 11 28 ()

CBS

박기영 강원도의회 "선제 대응으로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해야"

강원CBS 박정민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에서 제기됐다.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28일 진행된 강원도 건설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신속한 제설 및 도로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교통사고는 2020년 7039건, 2021년 6605건, 2022년 6425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빙판길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60건, 99건, 62건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제공 이어 "빙판길 교통사고 총 221건 중 12월, 1월에 142건으로 전체 64%가 집중돼 있다. 초봄인 3월에도 35건이 발생하는 등 강원도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을 감안한 시기별 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겨울철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는 사고와 재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많은 인명피해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겨울철 도로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제설 및 안전관리에 더욱 유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원도민과 우리 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분들께서도 겨울철 안전운행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3 11 28 ()


연합뉴스

강원 3년간 빙판길 교통사고 221건..."시기별 안전대책 필요"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겨울에서 초봄까지 강원 지역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시기별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박기영(춘천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221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는 2020년 7천39건, 2021년 6천605건, 2022년 6천425건으로 줄었다. 이 중 빙판길 교통사고 건수는 연도별로 각각 60건, 99건, 6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빙판길 교통사고는 12월과 1월에만 142건(64%)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초봄인 3월에도 35건이 발생해 박 위원장은 강원도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시기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겨울철 도로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제설·안전관리에 더욱 유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도민과 관광객들도 겨울철 안전 운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37

2023 11 2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근거 마련

박종성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지원이 가능해져 예방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영 의원은 “도내 청소년 및 고령층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률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ao.com

2023 11 28 ()

NWS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박순주 기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NWS방송=박순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지원이 가능해져 예방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영 의원은 “도내 청소년 및 고령층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순주 기자

2023 11 28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폐천부지 매각 “기사, 허구성 지적”

김용기 기자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폐천부지 매각 관련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허구성 지적”

[강원=글로벌뉴스통신]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8일 (화) 진행된 건설교통국 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폐천부지 매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그 기사 내용의 과장성과 허구성에 대해 논리적인 지적과 따끔한 질책을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2년 7월 29일자 “강원도 폐천 공유재산 ‘직접 매각’ 세수 4000억원 창출 나선다”는 제하의 모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전형적인 침소봉대형 기사”라며 “매년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80억 정도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4천억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낚시성 기사”라고 질책하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 등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도 재정안정화나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세수효과 창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업방침의 전환에 있어서 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양 의원은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한 도의 사업방침이 1년도 안되어서 ‘직접 매각 중점 추진’에서 ‘하천자산 취득 및 토지 비축’에 주력하여 공공사업 및 기업유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바뀐 부분을 언급하며 “사업방침의 전환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향후에는 사업방침의 전환과 언론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답했다.

2023 11 28 ()

스포츠서울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폐천부지 매각 관련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허구성” 지적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양숙희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8일 (화) 진행된 건설교통국 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폐천부지 매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그 기사 내용의 과장성과 허구성에 대해 논리적인 지적과 따끔한 질책을 했다.

양의원은 지난 22년 7월 29일자 “강원도 폐천 공유재산 ‘직접 매각’ 세수 4000억원 창출 나선다”는 제하의 모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전형적인 침소봉대형 기사”라면서 “매년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80억 정도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4천억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낚시성 기사”라고 질책하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 등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도 재정안정화나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세수효과 창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한 도의 사업방침이 1년도 안되어서 ‘직접 매각 중점 추진’에서 ‘하천자산 취득 및 토지 비축’에 주력하여 공공사업 및 기업유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바뀐 부분을 언급하며 “사업방침의 전환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향후에는 사업방침의 전환과 언론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답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3 11 28 ()

亞州經濟

김기하 의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완료 앞당길 방법 있어"- 사안의 중대성 감안, 사업완료 시점 대폭 앞당겨야 - 특별교부금 활용해 사업 기간 단축
해야 할 것

2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완료 시점을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28일 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각 학교당 1억원씩 배정”되었다면서 “23년도 추경(13억7천만원)을 통해 실시된 63개 학교의 사업결과를 보면 학교당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가 사업 범위에 따라 평균 2000만원에서 2300만원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사업 결과를 유추하면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으로 학교당 1억원씩 배정한 특별교부금은 사업비가 상당히 남을 것이라며, 남은 사업비로 연도별 환기시설 개선 대상 학교의 수를 늘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계획’에 따르면 584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개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여유있게 지급되어 사업 진행을 서두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2024년 예산이 200억이상 책정되어 전체 사업 대상 학교의 60%인 348개 학교에 대해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25-26경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2년 폐암 검진 결과>에서 1758명 중 3명이 폐암 확진판정을 받으바 있으며, 폐암의심, 폐결절 등 폐 질환자가 707명으로 전체의 40.2%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별도 의견교환을 갖고 사업 진행의 추이를 관찰해 추경 등의 방법으로 예산안 조정을 거치면 사업의 조기 완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을 감안한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아주경제=춘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2023 11 28 ()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급식 조리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 완료' 앞당길 방안' 제시

고정화 기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각 학교당 1억원씩 배정
-특별교부금은 사업비가 상당히 남을 것이라 지적
-남는 사업비로 연도별 환기시설 개선 대상 학교의 수를 늘려 사업 완료 시점 앞당기자 제시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의회제공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완료 시점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원동해 2)은 28일 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각 학교당 1억원씩 배정”되었다고 밝히며 “23년도 추경(13억7천만원)을 통해 실시된 63개 학교의 사업결과를 보면 학교당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가 사업 범위에 따라 평균 2,000만원에서 2,300만원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김기하 의원은 2023년 사업 결과를 유추하면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으로 학교당 1억원씩 배정한 특별교부금은 사업비가 상당히 남을 것이라 지적하고, 남는 사업비로 연도별 환기시설 개선 대상 학교의 수를 늘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계획'에 따르면 584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개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여유있게 지급되어 사업 진행을 서두를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2024년 예산이 200억이상 책정되어 전체 사업 대상 학교의 60%인 348개 학교에 대해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25-26년경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2년 폐암 검진결과'에서 1,758명 중 3명이 폐암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폐암의심, 폐결핵 등 폐 관련 질환자가 707명으로 전체의 40.2%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안 심사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별도 의견교환 진행 후 사업진행의 추이를 관찰해 추경 등의 방법으로 예산안 조정을 거치면 사업의 조기 완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36

江原日報

2023 11 29 ()

19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수능 성적표는 12월8일 제공될 예정이다. 형설지공으로 공부한 강원자치도 수험생 모두 원하는 성적 이상의 성적표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28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변화를 예고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교과를 통합과목으로 치르고 학교 내 신성적도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적용 중이며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적용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통합교과 수능과 고교학점제는 모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말 그대로 '이율배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고교학점제를 만들어 놓고 수능을 통합과목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탐구 과목은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아홉 개 과목이며 과학탐구 과목

강원포럼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은 생명과학 I 과 II, 화학 I 과 II, 물리학 I 과 II, 지구과학 I 과 II 등 여덟 개 과목이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과목만을 선택해 공부하고 수능은 영역별 전 과목을 통합으로 치르게 되면 공부하지 않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대학입학의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하는 대학이 많다.

이율배반, 고교학점제와 통합수능

세부 과목별 수능에서는 학생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므로 기준등급을 맞추기가 용이하지만 통합교과 수능에서는 모든 과목의 내용을 공부해야 하며 과목 수가 축소돼 기준등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학교 내신성적 산출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약화돼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등급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돼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매우 높다.

대학입시에 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게 된 배경에는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는 일과 함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본격화되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무력화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학부모들은 수능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교육 시장이 잘 갖춰진 도회지를 찾을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은 큰 위기를 맞을 게 뻔하다.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학전형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대학입시제도가 재채기를 하면 초·중·고등학교에는 바람이 분다. 지역 교육을 살리는 대학입시 정책이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지름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로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는 때에 교육부에서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로서 즉시 재검토돼야 한다.

2023 11 28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 하석균(원주) 기획행정부위원장, 엄윤순(인제) 농림수산부위원장,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29일 오전 11시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리는 2023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박찬흥(춘천) 도의원은 29일 오후 3시 강원디자인진흥원 전시장 1층에서 열리는 강원디자인페스타 2023 오프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10

대회에참석한다.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오전 11

시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12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춘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리는 디자인페스타 오프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17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29일 오전 11시 인제하늘

내린센터에서 열리는 2023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다.

2023 11 29 ()

강원도민일보

04

학교 급식실 안전을 영양사가?...책임 떠넘기기 논란 확산

도교육청 안전보건규정 개정안
학교장서 책임주체 전환 추진
도내 교육계 반발 항의글 쇄도
“논의 후 내일까지 발표”해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존에는 학교장이 맡던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을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원도내 영양교사들이 ‘안전 관리 책

임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를 일선 학교현장에 배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 주체 변경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 급식실 안전 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교육청은 이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에 대해 도

교육청과 학교장이 아닌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관리 조직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당장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중심으로 강원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도 영양교사회, 학비노조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을 향의 방문해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건은 아니다”라며 “현재

부교육감 결재까지 진행돼 담당부서 선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강원 교육정책제안’ 코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100여 건 게시되기도 하는 등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박은혜 전교조강원지부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급식실에서 우려를 하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지게 된다.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책임만 전가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7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의 반발에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도 있게 논의해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에게 답을 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달 30일까지는 입장을 발표하려 한다”고 했다.

정민영 jmy4096@kado.net

2023 11 29 ()

江原日報

02

쟁점 예산 놓고 여야 힘겨루기... 강원 현안 뒷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눈앞... 지역 사업 논의 시간 부족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증액이 필요한 강원자치도 등의 지역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예결특위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는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소소위’를 꾸려 협의에 나선 것이다.

‘소소위’는 현재 여야 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 중인 쟁점 사업은 R&D(연구·개발)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쟁점 예산에 밀려 지역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심도 있

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강원도는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43억원), 춘천 소양8교 건설(49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480억원 증액),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12억원) 등 10대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물론 강원 지역 시장·군수들도 잇따라 국회를 찾아 지역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12월 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



북한의 임남댐 무단방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28일 화천댐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육군 2군단,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제공=화천군청

민관군 7개 기관 '북 임남댐 무단 방류 대응' 맞손

도·화천군·2군단 등 업무협약

강원특별자치도가 북한의 임남댐 무단 방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대응 체계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 민·관·군 7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확대 체결했다.

강원도는 28일 화천댐에서 국가정보원, 화천군, 2군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강홍수통제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임남댐 무단방류 사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강원도 등 7개 기관이 사전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 것은 앞서 2020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 북한이 임남댐을 무단방류, 북한강 상류지역인 화천군에서 수상부교와 접안시설 등이 유실돼 27억6700만원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는 등 홍수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면서 협약이 확대 체결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9·19. 군사합의일 부효력 무효화를 선언하자 북은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황인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초 협약식은 2020년 12월에 열렸다. 박지은

청소년올림픽 성공 의지 원주서 타올랐다

‘강원2024 성화 투어’ 개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화합의 장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가 원주를 환하게 밝혔다.

원주시와 대회 조직위는 28일 원주 육민관고 체육관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원주시 성화 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투어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재열 IOC 위원, 최종구·진종오 조직위 공동위원장, 원강수 원주시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방종식 육민관고 교장을 비롯한 육민관고 3학년 학생 2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원주 성화투어는 도내 18개 시·군 중 7번째로 열렸으며, 유 장관이 성화투어에 참석한 것은 대회 100일 전 기념행사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진종오 위원장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램프를 들고 체육관 안에 들어오자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육민관고 흥준호 교사와 원주시청 역도실업팀 함은지 선수, 재학생인 원재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원주시 투어 행사가 28일 원주 육민관고 체육관에서 열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재열 IOC위원, 최종구·진종오 조직위 공동위원장, 원강수 원주시장, 주영일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종식 육민관고 교장을 비롯한 성화 주자들이 성화거치대에 성화를 점화하고 있다. 원주=박승선기자

양, 정주현군, 신성빈군 등 5명이 점화자로 나섰다. 점화자들은 각각 유인촌 장관과 김진태 도지사, 최종구 위원장, 김재열 위원, 원강수 시장과 함께 성화봉을 맞대는 ‘토치 키스’ 후 마지막으로 성화료에 불을 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육민관고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준 만큼 꼭 이번 올림픽이 성공할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 대회가 이제 52일 남았는데,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에 모든 이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며 “전 경기가 무료이며, 인터넷 예매를 통해 관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원강수 시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자치도에서 열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원주시도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이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미래의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을 지켜봐 달라. ‘Grow Together, Shine Together(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올림픽 슬로건처럼 도민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일 속초를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돌고 있는 성화 투어는 다음 달 28일 강릉에서 마무리된다.

원주=김인규기자 kimingyu1220@

강원도민일보

‘수변도시 춘천 구현’ 경관 가이드라인 재정비

고은리 도청부지 등 신규 지정 용역 착수, 내년 5월부터 적용 시 “개발 막겠다는 취지 아냐”

봉의산 스카이라인을 지켜라.

춘천시가 지역 개발사업에 대비,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개발사업이 예정된 다원지구와 동내면 고은리 도청 이전부지는 물론이고 중앙로터리 일대와 춘천역, 소양로 일원을 신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관 심의 조건을 강화하

기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춘천경관계획 재정비 일정을 발표했다.

2019년 수립한 춘천시 경관계획 적용 시기가 종료되면서 차기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다가오자 춘천시는 아예 춘천다운 지역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경관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변도시 춘천 구현이다. 예정된 지역

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봉의산과 의암호, 북한강 등 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의 경우 일부 건물만 우뚝 솟아있는 일명 ‘핀셋형 건물’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관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경관가이드라인에는 건물 높이는 물론이고 건물 외관 이미지, 색채 등이 포함된다.

개발사업이 예정된 다원지구와 고은리 일원, 도청사 이전이 예고된 중

양로터리 일원과 춘천역, 소양로 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춘천시는 이 같은 계획이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육동한 시장은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춘천의 자원이 봉의산이 건물에 가려지고 의암호도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춘천시 발전을 위해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발을 위한 환경은 조성하되 그 개발이 춘천 이미지와 여건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tp@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17

화천 숲가꾸기 산불예방·난방 지원 일석이조

군, 방천리 일대 89ha 산림 정비
산불 마을 확산 사전차단 효과
목재·부산물 40t 난방연료 전달



화천군은 최근 간동면 방천리 일대 군유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실시, 작업 중 발생한 부산물을 인근마을에 연료용으로 제공했다.

화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이 대형산불 예방은 물론 인근 마을에 난방연료까지 지원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최근 간동면 방천리 일대 군유림에서 '2023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목재 등의 부산물 40여t을 인근 방천리 마을 10개 농가와 간동면 유촌리 산림탄소순환마을에 난방연료로 전달했다.

군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마을까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가 주변 산림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솎아베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하는 재해예방 사업이

다. 올해도 지난달부터 간동면 방천리 일대 약 89ha 면적의 산림에서 숲가꾸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지역은 소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나무들이 뺏뺏하게 섞여 자라는 곳으로 민가와 농지가 연접해 있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군은 소나무류 등 화재에 취약한 수종은 적정 밀도로 조정하고 산불에 다소 강한 참나무 등 활엽수는 보호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산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의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 대형산불 등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호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 19

특별자치 시도 '지방 전성시대' 열길

-강원·제주·세종·전북 협의회 출범, 시너지 기대

강원과 제주·세종·전북이 지난 27일 대한민국 특별자치 시도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연대와 협력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4개 광역자치체의 연대는,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과 수도권에서는 '메가시티 서울구상' 논의가 한창입니다.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정치와 산업, 교육, 의료, 문화의 서울 집중이 더해지면 비수도권 공동화는 가속합니다. 이런 지방의 위기 속에서 특별자치 시도 협의회 구성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 연대가 광역자치도의 발전과 함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특별자치 시도 상생협력 협약' 이후 4개월 만에 구성됐습니다. 4개 시도는 그동안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 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만큼 공동 대응의 내용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방식도 정해졌습니다. 3월과 9월 정기 총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열어 기민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해 기대를 모읍니다.

시도지사들의 공동 결의문을 통해 연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자치 시도는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구현하고,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과 함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해 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을 실현하기로 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협의회는 당면 과제는 자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지방정부 위상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이 숙제입니다.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분야의 규제 해소와 특례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것은 물론,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 시도 협의회와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협의회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정부 협상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9 ()

/ 19

도농업기술원 10억원 감액 파문 살피길

-도의회소위 예산심의거부 및 농업인 시위...유연한 조정을

강원도농업기술원 내년 예산안 대거 감축과 농정국의 불균형 편성을 지적하는 농업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탁상행정식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7일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소속 14개 단체 공동으로 정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늘리는 등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예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개선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는 도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에서 도청앞에서 수정예산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 교육과 종자 생산, 보급 등을 위주로 하는 도농업기술원의 2024년 예산안은 491억원으로 올해 602억원에서 18% 감축된 110억원 깎였습니다. 폐지 및 감축하는 사업은 무려 120개에 달합니다. 농업 인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해 활동력을 증대하는 사업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 비용은 무려 87%나 감축함으로써 148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도 7억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농정국 예산 중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사업은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농촌의 실질적인 일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도 3분의1 가까이 감축됐습니다. 도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는 “농업·농촌을 포기하려고 하는 가의 문이 들 정도”라며 도에서 스마트농업단지 예산을 300만원에서 내년 5억3600만원으로 갑자기 167배 폭증한 반면 임대농기계와 여성 및 청년인력 지원 같은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은 희생시켰다고 제기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유지 발전하려면 인적자원의 역할이 농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 마을활동가 등으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첨단설비 투입이 시급하긴 하나 시설비는 증액하면서 농업인 활동과 역량 강화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농민 어려움을 외면하는 도농업기술원 예산안이라며 예산 심의를 거부한 도의회 농림수산위 측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보급과 현장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위 심의없이도 예결위로 농업예산을 넘길 수 있으나, 문제점해소가 아닌 갈등과 대립을 격화하는 것이므로 도와 도의회는 여론을 경청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11 29 ()

/ 19

지자체 살림 '한파', 지역경제 살릴 방안 시급하다

지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본보가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의 2024년 당초 예산을 올해와 비교한 결과 강릉시(298억원 감소)와 홍천군(683억원 감소), 횡성군(257억원 감소), 양구군(211억원 감소), 인제군(298억원 감소), 고성군(257억원 감소), 양양군(96억원 감소) 등 7개 시·군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상승 폭도 크지 않다. 삼척시가 가장 큰 폭인 8%(499억원), 원주시 5.49%(871억원), 영월군 5.1%(275억원) 등만이 5%를 넘겼을 뿐이다. 0.8%(630억원)를 올린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의 예산 상승률은 5% 미만에 그쳤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372억원을 추가 투입해 201억원(3.86%)을 증액시킨 동해시와 평창군 34억원(0.6%), 철원군 16억원(0.29%), 화천군 1억원(0.02%) 증액 등은 올해 월평균 3% 안팎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 한파는 59조원으로 예상되는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로 인해 도를 비롯한 시·군의 교부세가 1조원 가까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등 글로벌 악재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쳤다. 국가 세수의 평크는 지방정부의

살림을 옥전다. 국고보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본래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내 지자체 살림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하락에 따른 취득세 세수 감소까지 더해졌다. 실제 도는 내년에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1,282억원, 취득세 1,638억원, 지방소비세 131억원 등 3,100억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예측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긴축 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하다.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지자체의 각종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 및 연기되면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다시 세수가 모자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 예산 삭감은 민간 기업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게 뻔하다. 지역으로서는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엄청난 재앙이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로서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한꺼번에 조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축소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씨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민 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문화, 교육 환경 개선 등 필요한 분야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빈틈없이 집행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11 29 ()

/ 19

지역 특화·연대로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자치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공동 결의문도 채택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특별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 선도모형을 구현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 확충과 재정·세제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선언적 수준을 뛰어넘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와의 역할이 그래서 막중하다.

한국은 모든 게 수도권에 쏠려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지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2% 등으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다. 인구 집중이 둔화된 때도 있었다. 2010년 정부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수도권 쏠림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만큼 지방은 공동화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 제2거점으로 이 지역은 2015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늘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9년까지 20~30대를 중심으로 12만7,600명이나 줄었다.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육 여건과 일자리, 문화 인프라, 의료시설 등이 지방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듯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는 이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열심히 살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란 희망은 더불어 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

이다.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릴 화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끊어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 젊은이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공식 출범

재정 확충·세제 자율성 확보 등 공조 다짐

선언적 수준 뛰어넘어 실천력 보여줘야 할 때

이 결혼을 포기하고 ‘헬 조선’이라는 용어가 일상 언어로 정착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세태야말로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치솟는 아파트 값과 부동산 광풍은 서민들의 생활 의욕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정책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 해소, 교육·의료·문화 등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등 장기 비전을 담은 대책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끊임없이 주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와 연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